

# 광주 한국노총 “광주형일자리 왜곡 대기업 노조 묵과 않을 것”

### “더 이상 노동자와 노조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3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완성차 대기업 노조 간부들에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대기업 노조 간부들의 반연대적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올리기 위해 노동의 참여를 짓밟는 사업주의 지시에 순응하고 나아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착취구조에 편승했던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을 반성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보다 임금이 적을지라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고 격차 해소에 도움 된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일부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근거들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낮은 임금과 노동 통

제를 통한 지속된 일자리’라고 한 데 대해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이 서로 의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산업을 고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높은 노동비용과 짧은 노동시간에도 일자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최강국 독일이 취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기업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포기하고, 착취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자동차산업이 포화상태”란 비판에 대해서는 “산업이 포화상태라면 대기업 노조가 어떻게 사업주에게 투자와 증산, 특근, 인력 채용을 요구하겠느냐”며 “반대 논리가 공색해지자 역지로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했다.

‘생산 차종이 겹친다’란 주장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하려는 차종은 경SUV”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과 다를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한국노총을 매도하고 광주형 일자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일자리 반대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 간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를 왜곡하며 대기업 노사가 답합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울러 “지역의 청년과 학생, 부모·형제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애타게 응원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노동자도 지지하고

있다”며 “더이상 노동자와 노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신봉우 기자

## 경비원 처우 개선·인권 보호 광주노동청 오늘 간담회 연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광주지방노동청이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노동청은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경비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아파트임주자대표회의의 광주시지부, 용역업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LH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광주지방노동청지원센터, 경비노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단기 계약(3개월 또는 6개월)이 31.6%를 차지했고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 형태는 대부분 ‘24시간 교대제’로 태매 수령 등을 이유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조직 취약노동자에 해당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단체가 많지 않다는 것 역시 입주민 갑질에 취약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오유나 기자

## 5·18단체 “노태우 본인 진정성있는 사죄 있어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씨가 최근 광주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5·18가족들을 만난 가운데 5·18단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씨가 5·18희생자에 대한 참회의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5·18학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 광주 1~5월 음주운전 1811건...교통사고 작년비 19% ↑

### 경찰 “음주운전 근절 단속 확대”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269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졌고, 47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22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

고보다 19%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이었고, 부상자는 413명이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1월 28일부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전환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811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

간 1563건에 비해 15.9%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13일부터 음주단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며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월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음주단속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행정소송 제기 참여자치21 “당사자, 국가인권위 진정...시, 책임 규명해야”

광주시가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광주시 산하기관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근무했던 간부 A씨가 부당해고에 이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했지만 2018년 10월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민선 6기 전임 시장 시절 기간제로 임용됐던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 완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와 건강타운을 관리하는 복지재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2018년 12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한 감사를 진행 ‘복지재단 내 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A씨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해 5월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불법 전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했다’며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해 11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와 복지재단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작년 11월 1275만원과 올해 1월 17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참여자치21은 “A씨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서 내용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